

2018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 정 사 (1교시) -



성 명 :

응 시 번 호 :

응시자 유의사항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해 양 경 찰 청

형 법

1.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수차의 법령개폐로 인하여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가장 최근의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
- ②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 ③ 누설한 군사기밀사항이 누설행위 이후 평문으로 저하되었거나 군사기밀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판시법 적용 여부가 문제될 여지는 없다.
- ④ 형법 제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공모지도 범죄자가 된다.

2. 甲의 행위와 乙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甲이 운행하던 자동차에 치여 반대차선의 1차선상에 넘어진 도로횡단자 乙이 그 직후 반대차선을 운행하던 화물차에 역과되어 사망한 경우
- ㉡ 甲이 주먹으로 乙의 복부를 1회 힘껏 때린 결과 장과열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한 乙이 의사의 수술지연으로 결국 복막염으로 사망한 경우
- ㉢ 甲이 야간에 2차선의 굽은 도로 위에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은 후에 그것을 미처보지 못한 乙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그 화물차에 충돌하여 乙이 사망한 경우
- ㉣ 甲이 입힌 자상(刺傷)으로 인하여 급성신부전증이 발생되어 치료를 받게 된 乙이 음식과 수분의 섭취를 억제해야 하는 사실을 모르고 콜라와 김밥 등을 함부로 먹은 탓에 패혈증 등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다음 중 간첩방조죄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단순히 간첩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
- ② 간첩을 숨겨주는 행위
- ③ 무전기를 매몰하는데 망을 보아주는 행위
- ④ 북한의 대남공작원을 상륙시키는 행위

4.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어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 ②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선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채권추심을 위한 것이라면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고 폭행죄 또는 협박죄만 성립한다.
- ③ 자구행위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권은 보전할 수 있는 권리임을 요하므로, 명예와 같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권리는 자구행위의 청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명예훼손행위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5. 정당방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절도범이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는 것을 발견하고 제3자가 현장에서 그를 추격하여 체포하는 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
- ㉡ 긴급피난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만 정당방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 ㉢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한다.
- ㉣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여지는 없으나 과잉방위가 될 수는 있다.
- ㉤ 정당방위에 있어서는 반드시 방위행위에 보충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나 방위에 필요한 한도 내의 행위로서 사회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임을 요한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6. 다음 중 임의적 물수의 대상은?

- ①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한 아편
- ② 배임증재에 제공하려고 한 재물
- ③ 배임수재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
- ④ 공무원에게 공여의사를 표시한 금품

7.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이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유효한 승낙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무고죄는 부수적으로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죄이므로 피무고인이 무고사실에 대하여 승낙한 경우 무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 ③ 피해자의 현실적 승낙이 가능하면 추정적 승낙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甲과 그것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乙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甲이 그 건물에 침입한 경우 그 침입에 대한 乙의 승낙은 추정되지 않는다.

8.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마약취급의 면허가 없는 자가 제약회사에서 쓰는 마약은 구해주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고 생아편을 구해 준 경우
- ② 채광업자가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준 것을 믿고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한 경우
- ③ 생활용품 제조사가 자신이 제작한 물통의 상표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변리사의 자문과 감정을 믿고 그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상표법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 ④ 2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온 형사계 강력반장이 검사의 수사지휘대로 하면 적법한 것이라고 믿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9. 책임능력에 대한 형법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형사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은 생물학적·심리적 혼합방법으로 판단한다.
- ② 심신상실자는 면책되고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③ 행위자가 귀머거리이면서 병어리라면 그 형을 감경한다.
- ④ 심신미약자에게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10. 중지미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의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
- ㉡ 행위자가 요청하여 제3자와 함께 이루어진 결과방지행위는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 ㉢ 자의에 의한 중지 중에서도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중지미수라고 본다.
- ㉣ 타인의 재물을 공유한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후 자의로 가등기를 말소했다고 하더라도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살해의 고의로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칼로 수 차례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자의로 그만 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11. 공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제한적 정범개념에 의하면 공범규정은 형벌 제한사유가 된다.
- ㉡ 판례는 범죄공동설의 입장에서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 대신 객관적 요건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 ㉢ 범행가담자간에 상명하복 관계가 있는 경우라도 범행에 공동 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 ㉣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면 그 가담 이후는 물론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 ㉤ 교사범, 방조범도 공범에 해당하므로 공동정범과 같이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한다.

① ㉡ ② ㉠, ㉢ ③ ㉡, ㉣ ④ ㉢, ㉤

12. 공범과 신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판례는 형법 제33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본문은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에 대한 공범성립의 문제를,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에 한하여 과형의 문제를 각각 규정한 것으로 이해한다.
- ㉡ 상습도박자가 상습성 없는 자의 도박을 방조한 경우에는 제33조 단서에 따라 중하게 처벌될 수 없고 도박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하게 된다.
- ㉢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부작위자들에게 공통된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
- ㉣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 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와 관련하여,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기부행위 주체자에 해당하는 범조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 예비·음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 행위자가 자의로 실행의 착수를 포기하였더라도 중지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② 예비·음모를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그 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 ③ 정범이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한 행위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으로는 물론 방조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 ④ 살인죄의 예비행위는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14.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술을 마시고 찻집방에 들어온 자가 찻집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시고 들어와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찻집방 주인에게는 후문으로 출입하는 모든자를 통제·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 대학병원의 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래담당 의사 및 담당 수련의들의 처치와 치료결과를 주시하고 적절한 수술방법을 지시하거나 담당 의사 대신 직접 수술을 하고 농배양을 지시·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여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의 계속성을 가지는 않았지만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한 경우라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가 인정된다.
- ㉣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경기보조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 ㉤ 무모하게 트럭과 버스 사이에 끼어들어 이 사이를 빠져 나가려는 오토바이를 선행차량이 속도를 낮추어 오토바이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선행하도록 하여 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야간에 甲은 이층방에서 자고 있는 A를 강간하기 위해 침입하려고 하였다. 甲이 창문으로 머리를 들이 밀었을 때 마침 잠에서 깨어난 A가 이를 발견하고 ‘불이야’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놀란 甲은 그대로 도주하였다. 판례에 의할 경우 甲의 죄책은?

- ① 주거침입죄의 미수와 강간죄의 미수
- ② 주거침입죄의 기수와 강간죄의 미수
- ③ 주거침입죄의 미수
- ④ 주거침입죄의 기수

16. 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어 배임죄가 성립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
- ㉡ 절취한 자기앞 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
- ㉢ 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임의로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여 횡령한 다음, 다시 타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준 경우
- ㉣ 종종으로부터 종종 소유 토지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이던 자가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그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시 그 토지를 매도한 경우 그 매도행위
- ㉤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행위

- ① ㉠, ㉡ ② ㉡, ㉢
- ③ ㉢, ㉤ ④ ㉢, ㉤

17. 통화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진정한 통화인 미화 1달러 및 2달러 지폐의 발행연도, 발행번호, 미국 재무부를 상징하는 문양, 재무부장관의 사인, 일부 색상을 고친 경우에는 통화가 변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②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통화위조죄가 성립한다.
- ③ 한국은행권 10원짜리 주화의 표면에 하얀 약질을 하여 100원짜리 주화와 유사한 색채를 갖도록 색채의 변경만을 한 경우에는 통화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경우 위조통화 행사는 언제나 기망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으므로 사기죄는 위조통화행사죄에 흡수된다.

18. 성폭속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음행의 상습이 있는 미성년자를 영리의 목적으로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42조의 음행매개죄가 성립한다.
- ②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자가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하는 경우,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불특정다수인이 인터넷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이는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 ④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형법 제243조(음화반포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9. 甲은 乙과 공모하여 A녀를 강간하기 위해 A녀에게 칼을 들이대고 협박하였지만, A녀의 애원에 못 이겨 강간의사를 포기하여 乙에게 그냥 돌아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나 직후 乙은 A녀를 강간하였다. 甲의 형사책임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죄의 불능미수
-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죄의 장애미수
-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죄의 중지미수
-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죄의 공동정범

20. 다음 중 형법상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로만 묶인 것은?

- ① 중범 - 심신미약자
- ② 자수·자복 - 중지미수
- ③ 과잉자구행위 - 불능미수
- ④ 농아자 - 과잉방위

21.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위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 ㉡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 일반인에게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일지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
- ㉣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건물에서 나가면서 가재도구 등을 남겨둔 경우에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 ㉤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신체의 전부나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경우 주거 침입미수죄가 성립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22. 甲이 乙에게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자 乙은 이를 승낙했다. 이를 후 乙은 마음이 바뀌어 甲이 전혀 예상한 바와 전혀 달리 A의 자동차만 야구방망이로 부수고 돌아왔다. 甲과 乙의 형사책임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 - 불가벌, 乙 - 손괴죄
② 甲 - 살인죄의 예비·음모, 乙 - 손괴죄
③ 甲 - 살인죄의 예비·음모,
乙 - 살인죄의 예비·음모와 손괴죄의 실체적 경합
④ 甲 - 살인죄의 예비·음모와 손괴죄 교사범의 실체적 경합,
乙 - 살인죄의 예비·음모와 손괴죄의 실체적 경합

23. 다음 중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해방감경규정”의 적용이 없는 범죄는?

- ① 인신매매죄, 인질강도죄
② 인질강도죄, 체포·감금죄
③ 체포·감금죄, 인질상해죄
④ 인질상해죄, 인신매매죄

24. 사기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혼인의 의사 없이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면,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 ②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 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역시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닌 이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 ③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러한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하여 피해자들이 도박에 참가한 경우 피고인이 그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다면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와는 별도로 도박죄도 성립하며 양자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④ 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다수의 다른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 별로 수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25.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감척어선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제3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제3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 받은 후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감척어선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입찰에 있어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얻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
- ㉢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변론기일소환장 등 소송서류를 허위주소로 송달하게 한 경우
-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6.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 ②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하여 미용의 목적으로 환자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치료를 한 행위는 치과적 치료 목적을 벗어난 시술로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 이므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3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의 통상적인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 ④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에 규정된 ‘흥기’는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 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절도를 위해 일반적인 드라이버로 택시 운전석 창문을 파손한 경우에는 흥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7.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 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 ②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종업원의 위법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 한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한다.
- ③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양벌규정에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에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④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법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

28.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였다면 언제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한다.
- ② 원인행위를 실행의 착수로 인정할 경우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의 원칙이 유지된다.
- ③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형법상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29.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살해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살인행위나 치사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면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② 피고인이 여러 공범들과 피해자를 상해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등은 상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모자 일부가 사건 현장에 가서 위 피해자를 상해하여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은 상해치사범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 ③ 피고인이 선단의 책임선인 제1봉림호의 선장으로 조업 중이었고 피고인으로서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을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 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같은 상황 하에서 피고인이 풍랑 중에 종선에 조업지시를 하였다면 종선의 풍랑으로 인한 매몰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 ④ 선박의 등화단속을 담당한 책임자가 실화하였는데 선장에게는 동 담당자를 지휘·감독할 행정상의 책임만 있고 등화 단속에 대한 직접 책임은 없으므로 책임자가 실화하였다 할지라도 선장에게 업무상 실화로써 문제될 수 없다.

30. 甲은 乙을 살해한 후 바다에 시체를 버렸다. 그리고 살인에 사용한 칼도 바다에 던져 버렸다. 이 경우 甲 의 죄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살인죄
- ②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
- ③ 살인죄, 사체유기죄, 증거인멸죄의 경합범
- ④ 살인죄와 증거인멸죄의 경합범

31.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18조의 부작위범이 되기 위해서는 ㉠법익 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법적인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1) ㊶
- (2) ㊶, ㊺
- (3) ㊶, ㉔
- (4) ㊶, ㊺, ㉔

32. 결과적 가중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 및 사망의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를 요한다.
- ② 교통방해치사상죄의 경우 교통방해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때에는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던라도 그 죄가 성립한다.
- ③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결과는 결과적 가중범의 요건에 비추어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④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집단방화하기로 공모하고 그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집단원이 고의로 살상을 가한 경우에 다른 집단원에게 그 사상의 결과가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면 다른 집단원도 그 결과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의 책임을 진다.

33. 친족상도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직계혈족 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 ② 동거하지 않는 친족간의 공갈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주범에게는 직계혈족, 친족 등의 신분관계가 있고, 방조범에게는 위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는 경우 방조범만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
- ④ 경계침범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4. 준강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술값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술집주인인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아파트 뒤편 골목으로 유인한 후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한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 ②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범인으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 기수 여부를 불문한다.
- ③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사람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 ④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의 기수범으로 처벌된다.

35.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 ② 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함에 있어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 ③ 채무자가 채권의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계속 보관 중인 동산을 변제기 전에 임의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 ④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36. 유가증권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유가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 외에 증권의 유통성까지 필요로 한다.
- ③ 위조된 유가증권을 그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 ④ 판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 부분에 전자정보를 조작하여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로 만든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37. 甲은 A구 구청장에서 B구 구청장으로 전보되었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전화로 통보받은 후에 A구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을 한 경우 甲의 죄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문서변조죄
- ② 공문서위조죄
- ③ 허위공문서작성죄
- ④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38. 선박파괴·매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선박매몰죄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 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이를 매몰한다는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현존하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다는 등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지 않다.
- ㉡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에 대해 매몰행위의 실행을 개시하고 그로 인하여 선박을 매몰시켰더라도 매몰의 결과 발생 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범인이 선박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면 선박매몰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 ㉢ 도선사가 강제도선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으로 인하여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결국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선사가 하선 후 발생한 충돌사고 이므로 도선사의 업무상과실과 사고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9.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이를 거절하고 자신의 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그고 면도칼로 가슴을 그어 피를 내어 죽어버리겠다고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한다.
- ③ 불법주차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 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④ 위계를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이외에 별도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40. 무고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 甲을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면서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내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대여의 일시·장소도 사실과 달리 기재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 ③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무고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 ④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해 사 법 규

1. 「해양경비법」상 경비수역 중점 경비사항 중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6조의2에 따른 법령을 위반한 외국선박의 단속을 위한 경비는 어느 수역에 해당되는가?

- ① 연안수역 ② 근해수역
③ 원해수역 ④ 내수면

2. 「해양경비법」상 경비수역 내 점용·사용허가 등을 통보해야 하는 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 ①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② 「항만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
③ 「어촌·어항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 사업 시행
④ 「수산업법」 제9조에 따른 마을어업 등의 면허

3. 다음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맞는 것은?

- ㉠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 일시·장소 및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교육기관에서 ()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수상구조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시험이 정지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년간 수상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① 52 ② 55 ③ 68 ④ 70

4. 다음 중 「해사안전법」상 교통안전특정해역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 인천구역 ㉡ 제주구역 ㉢ 목포구역 ㉣ 부산구역
㉤ 울산구역 ㉥ 포항구역 ㉦ 동해구역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5.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우리나라 선위통보에 대한 용어와 그에 맞는 조치사항을 열거한 것으로 틀린 것은?

- ① 항해계획통보 :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를 출항하기 직전 또는 그 직후나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에 진입한 때에 행한다.
② 위치통보 : 항해계획통보 후 약 12시간 간격으로 행한다.
③ 변경통보 : 항해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 예정위치에서 12해리 이상 벗어난 때 또는 목적지 변경한 때에 행한다.
④ 최종통보 : 목적지에 도착하기 직전이나 도착한 때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을 벗어난 때 행한다.

6. 「해사안전법」상 선장이나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게 되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양사고의 발생 사실과 조치 사실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해야 하는 곳은?

- ① 해양경찰서장이나 지방해양수산청장
② 해양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소방서장
④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

7. 「해사안전법」상 항행 중인 것은?

- ① 엔진을 정지하고 표류중인 상태
② 었혀 있는 상태
③ 정박 중인 상태
④ 정박하고 있는 선박에 매어 놓은 상태

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이 정박 하거나 정류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한 것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② 인명구조 작업을 하기 위하여
③ 허가받은 잠수작업을 하기 위하여
④ 연료유 수급을 위하여

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상 해양 안전심판원의 심판관 또는 비상임 심판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없는 자는?

- ① 해양사고관련자 ② 조사관
③ 이해관계인 ④ 심판변론인

10.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상 해양 사고의 사실을 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관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는 자는?

- ① 군수
② 시장
③ 해양사고 목격자
④ 국가경찰공무원

11. 「선원법」상 항해 중 선내에 있는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수장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닌 것은?

- ① 사망 후 12시간이 경과할 것
② 선박이 공해상에 있을 경우
③ 선박에 시체를 신고 입항함을 금지하는 항에 입항할 예정일 것
④ 위생상 시체를 선내에 보관 할 수 없는 경우

12. 해기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선박 안에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중 어느 법률에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가?

- ① 선원법 ② 선박법
③ 선박안전법 ④ 선박직원법

13. 「선박법」상 선박의 뒷부분에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대한민국의 등대 또는 해안망루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② 외국항을 출입하는 경우
③ 해군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의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④ 공해상에서 조업 시

14. 「선박안전법」상 임시승선자가 아닌 자는?

- ① 운항관리자
② 선원과 동승하여 생활하는 선원의 가족
③ 선박수리 작업원
④ 낚시어선의 승객

15. 다음은 「선박안전법」에 따른 중간검사의 시기에 관한 서술이다. ()안에 내용이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경우 제1종 중간검사는 정기검사 후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검사기준일 전후 ()이내. 다만, 선저검사는 지난 번 선저 검사일로부터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3개월, 1년 ② 3개월, 3년
③ 6개월, 1년 ④ 6개월, 3년

16. 「선박안전 조업규칙」상 어업정보통신국에 특정 해역출어선은 1일 ()회 이상, 조업자제해역은 1일 ()회 이상, 일반해역출어선은 1일 ()회 이상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안에 적합한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① 3, 2, 1 ② 4, 3, 2
③ 3, 1, 2 ④ 4, 2, 1

17. 「어선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 ① 어선의 성능향상 도모
② 어선과 일반선과의 상이점을 규정하여 원활한 어선운항 도모
③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 확보
④ 어업생산력의 증진

18. 아래의 박스는 「어촌·어항법」상 어항의 지정권자에 관한 것이다. ()안에 적절한 단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국가어항 : ()
㉡ 지방어항 : ()
㉢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 ()

- ① 국무총리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② 해양수산부장관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③ 국무총리 - 지방해양수산청장 - 시장·군수·구청장
④ 해양수산부장관 - 시·도지사 - 지방해양수산청장

19. 「낚시 관리 및 육성법」상 낚시어선업의 신고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못한 것은?

- ① 선령 20년 이하인 목선
- ② 선령 25년 이하인 합성수지선
- ③ 선령 30년 이하인 강선
- ④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거나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

20. 「낚시 관리 및 육성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잘 볼 수 있는 출입할 장소에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표기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판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가장 맞지 않은 것은?

- ①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 ② 이용시간 및 요금
- ③ 출항제한의 기준
- ④ 수면 등에 유류·분뇨·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항

21.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가.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추월하려는 경우에는 추월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완전히 추월하거나 그 수상레저기구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음성신호·수신호 등 적당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고 좌현 쪽으로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 다.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내로 근접하여 운항하여서는 아니된다.
- 라. 다이빙대·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10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2. 「수상레저안전법」상 이용자의 신체가 직접 수면에 닿는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만 영업구역, 영업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기상·수상 상태가 악화된 경우
- ② 부유물질 등 장애물이 발생한 경우
- ③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유해생물이 발생한 경우
- ④ 유류·화학물질 등의 유출 또는 녹조·적조 등의 발생으로 수질이 오염된 경우

23. 「수상레저안전법」상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해양경찰청장 : 안전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지도·감독
- ② 지방해양경찰청장 :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자의 수상안전 교육
- ③ 해양경찰서장 : 면허증의 발급
- ④ 해양경찰서장 : 조종면허의 취소·정지 처분

24. 「수상레저안전법」상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가. 일반조종면허의 경우 제2급 조종면허를 취득한 자가 제1급 조종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제2급 조종면허의 효력은 상실된다.
- 나.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조종면허가 없어도 된다.
- 다. 조종면허 효력정지 기간에 조종을 한 경우 조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은 1차위반의 경우 면허정지이고, 2차 위반부터 면허 취소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5. 「유선 및 도선사업법」상 유도선 사업자가 승선하는 선원 및 그 밖의 종사자에 대해 매월 실시하는 비상상황 대비훈련이 아닌 것은?

- ① 선내숙지 훈련
- ② 퇴선 훈련
- ③ 기름유출대응, 소화 훈련
- ④ 인명구조, 추락 및 충돌·좌초사고 대응 훈련

26. 「유선 및 도선사업법」상 유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가 유선 및 유선장에서 해서는 아니되는 행위는 모두 몇 개 인가?

가.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게 하는 행위
 나. 요금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운항을 기피하는 행위
 라. 무리하게 승선을 권유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선 또는 선박 대여를 거부하는 행위
 마. 수상에 유류·분뇨·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7. 「유선 및 도선사업법」상 「해사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선 및 도선의 운항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야간운항을 하는 유선 및 도선은 운항 및 승객의 승선·하선에 필요한 불빛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소형 유선 및 도선이 하천 또는 호수를 횡단하고자 할 때는 다른 대형선박은 그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유선 및 도선은 시계를 제한받는 때나 교량, 유선장 및 도선장 등의 부근 및 하천 폭이 좁은 구역에서는 속도를 줄여 운항하여야 한다.
- ④ 유선 및 도선과 다른 선박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오른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28. 「유선 및 도선사업법」상 관할관청이 유·도선 사업의 폐쇄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 ②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 보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유·도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29.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오염물질기록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장은 폐기물·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에 대한 기록부, 즉 선박오염물질기록부를 그 선박안에 비치하고 그 사용량·운반량·처리량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② 선박오염물질기록부 중 기름기록부의 경우 모든 선박은 그 사용량·운반량·처리량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③ 피예인선의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선박오염물질기록부를 선박소유자의 사무실안에 비치하고 그 사용량·운반량·처리량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④ 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30.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해체의 신고 등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작업개시 7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육지에서 선박을 해체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박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31. 「수산업법」상 과징금의 용도 및 비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의 건조·수리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불법어업지도·단속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어장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지도·단속·수사 담당공무원의 지도·단속 근무수당 및 수사비는 징수한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

32. 「도선법」상 도선사가 도선의 요청을 받을 때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항만시설의 형편상 효율적인 선석 배정을 위하여 입·출항 순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선박의 운항이 제한된 경우
-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도선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④ 해당 도선업무의 수행이 도선약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3. 「영해 및 접속수역법」상 외국 선박의 통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 할 수 있다.
- ②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당국에 미리 알려야 한다.
- ③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의 수집을 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 ④ 잠수항행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3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 ②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 ③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외국과의 협정에서 따로 정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하여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35.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부속선에 옮겨 싣는 경우
다. 어업활동 승인을 받은 어선에 옮겨 싣는 경우
라. 어획물 운반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선박에 옮겨 싣는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6. 「해양과학조사법」상 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 허가에 관한 사항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 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3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허가결정을 한 경우 지체없이 그 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37. 다음 지문의 행위 대해 「해양경비법」에 따른 조치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선박 등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선박 등의 항행 또는 입항·출항 등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행위
- 선박 등이 항구·포구 내외의 수역과 지정된 항로에서 무리를 지어 장시간 점거하거나 항법상 정상적인 횡단방법을 일탈하여 다른 선박 등의 항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임해 중요시설 경계 바깥쪽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경비수역에서 선박 등이 무리를 지어 위력적인 방법으로 항행 또는 점거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행위

- ①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항행 보호조치는 연안 수역에서만 실시한다.
- ② 위험성이 따르는 행위이므로 행위중단 경고를 하고 곧바로 이동·해산·피난을 실행해야 한다.
- ③ 위의 행위에 대한 조치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④ 이동·해산 명령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8. 「해양경비법」상 해상검문검색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진로 등 항행상태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항행을 일탈하여 운항되는 선박 등은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대량파괴무기나 그 밖의 무기류 또는 관련 물자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 등은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국내법령 및 대한민국이 체결·비준한 조약을 위반하거나 위반행위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 등은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검문검색은 해양경비법 등 대한민국 국내법령에 따라 실시한다.

39. 「선박안전조업규칙」상 특정해역 어로보호본부의 사무가 아닌 것은?

- ① 어선단의 편성 또는 어선 승선 지도
- ② 어로보호를 위한 경비
- ③ 출어선의 동태파악
- ④ 범법 어선의 적발·처리 및 관계 기관 통보

40. 「선박안전법」상 선박위치발신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박위치발신장치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장치이다.
- ②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③ 선장은 해적 또는 해상강도의 출몰 등으로 선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작동을 중단할 수 있다.
- ④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중단시에는 즉시 그 상황을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